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9월 25일(금)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 협력 통해 다민족 · 다문화사회 대비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협력체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9년 9월 25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오는 9월 29일(화) 오후 1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협력체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협력체계”개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2009. 9. 29(화) 오후 13:00-17:30□ 장 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 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오는 9월 29일(화) 오후 1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협력체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커플 아홉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으로 탄생했다. 2007년도 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는 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이주민의 수가 많아지면서 다양성이 어우러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지위와 생활을 위해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진행해왔고, 이번 3차 년도에는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제1섹션에서는, “다인종·다민족사회의 사회통합 과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정책과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대중매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며,

○ 제2섹션에서는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향후 과제”,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 추진체계”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사회 각 부문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증진방안 등을 검토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이 다문화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구 및 전문가간의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붙임 1. 프로그램 순서

2. 발표초록

별첨 1. 프로그램 순서

시간	일정
13:00-13:30	등록
	전체사회: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3:30-13:40	환영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제 1 섹션	사회: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3:40-14:20	발표 1: 다인종·다민족사회의 사회통합 과제 발표: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해경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14:20-15:00	발표 2: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정책과제 - 심층면접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황정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5:00-15:40	발표 3: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대중매체의 역할 발표: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조교수)
15:40-15:50	휴식
제 2 섹션	사회: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
15:50-16:30	발표 4: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 민우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오재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소장)
16:30-17:10	발표 5: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발표: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17:10-17:30	종합토론

별첨 2. 발표초록

■ 발표 1: 다인종·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과제 (이선주)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자, 정부 역시 이런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인종/민족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계, NGO, 정책입안자들이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심도 깊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민과 (사회)통합(immigration and integration)의 맥락에서 사회적 응집을 이루기 위한 통합의 개념을 살펴보고, 왜 통합이 필요한가를 논의한다. 둘째로는 (사회)통합의 주요 형태를 동화주의 모델, 구분배제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이어서 쌍방향적 (사회)통합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회)통합의 지향성과 방향성, 그리고 더불어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 발표 2 :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정책과제 (황정미)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개별 이주자가 한국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동화되는 것을 전제하였으며, 이주여성들의 생활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서적 지지, 정체성 형성, 문화간 접촉 등의 복합적인 경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3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참여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로 정의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다른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은 네 가지 영역, 이웃·동네 주민과의 대면, 자녀교육 관련 참여,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참여, 이주민 자조모임 및 시민단체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은, 첫째 이주여성이 생활세계로서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외에도 다중적인 매개적 관계가 필요하다. 동향출신 이주여성 모임, 다국적 이주여성과의 모임, 한국인 교사나 실무자와의 만남, 이웃과의 관계 등 다양한 만남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됨으로써 이방인이었던 이주여성들이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점차 정서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 되는 데에는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 즉 국내 대학 진학, 안정적 취업, 그밖에 한국인이 인정하는 지위의 획득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의 자율성과 자생성을 존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결정과정에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이주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이 한국여성과 함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류자격이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영주권자,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도 ‘주민’이자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활동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발표 3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대중매체의 역할 (이창호)

본 연구는 다문화시민교육과 미디어와의 관계를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일상생활에서 인식과 이미지 형성의 핵심 도구인 미디어가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공무원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방송국 종사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문화 간 이해와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매체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사회통합정책 중 미디어를 통한 통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다문화정책 가운데 매체를 활용한 정책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다문화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매체정책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콘텐츠 육성 방안, 소수인종집단 미디어에 대한 지원정책, 매체종사자들의 다문화의식증진방안, 이주민들의 미디어이용현황 및 실태조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방송전문채널의 확보, 다문화방송제작가이드라인설정, 다문화프로그램의 확대 및 질 향상 등이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대중매체정책으로 제시됐다.

■ 발표 4 :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향후 과제 (민무숙)

본 연구는 최근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여 그 내용과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을 ‘기능적 전문성과 다문화적 역량의 소양을 갖추고 이주자 및 다문화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주자가 증가하는 초기단계에는 이들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요청되지만 향후 이주자 집단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신의 업무에 부가하여 지원하게 되는 집단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각기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문화이해강의인력, 가족지원인력, 언어지원인력, 상담인력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양성내용과 인력 활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및 강사, 방문지도사 33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경험과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이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된 과제로는 첫 번째 양성 추진체계 문제에 있어서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활용계획에 입각한 인력양성,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인력양성 분야에 있어서는 상담인력의 배치 및 전문화, 문화간 소통인력의 양성과 활용, 기관종사자 인력풀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종사자 전문성 제고의 과제로 이들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방안, 처우개선의 문제, 다문화민감성 교육 강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네번째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질 개선 과제로 연구과정에 기반한 양성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성있는 전문가 풀의 구축과 지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과제로 이주자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강구, 대학의 관련 교육과정 개설과 일반 공공기관 종사자의 다문화적 역량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발표 5 :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한승준)

이 연구는 유사한 문화적·사회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다문화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동아시아적 맥락에 부합하는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과 그 추진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국의 다문화정책은 국가 간에는 단순한 이주민 여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다인종화·세계화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다문화정책은 개별국가에서 이주외국인이 유입된 역사적 형성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수준은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이거나,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로 출입국관리나 고용관련 법제 및 기구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구체적인 일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언어, 교육, 의료 등 각종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3개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및 협력의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법 정비: 가칭 ‘이민및사회통합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고,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트롤타워의 설치: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 간 업무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무총리실에 다문화 관련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과 다문화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유형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조부처를 구분하고 정교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앙부처간 업무연계의 강화: 부처 간 업무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평가에 있는 부처간 사업의 중복성 및 협력적 사업추진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에서 지방으로: 현재의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전달하는 획일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앙과는 차별화되는 지역의 다문화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농협,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지원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적·비공식적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센터’ 기존의 공공시설들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 및 의견교환, 공식모임, 물적·인적자원 공유, 계약,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민관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